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

일시 2026년 01월 22일(목) 10시~13시 장소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

행정통합 시민사회 대응팀 광주시민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진보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 광주교사노동조합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평화연대 / 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 / 광주민우회 / 광주민우회국동체네트워크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통합시민사회대응팀이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뉴스

“행정통합, 광주 해체인지 자치분권 재설계인지 살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광주·전남 시도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교육자치 보장 필요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행정통합 시민사회 대응팀은 22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광주’의 브랜드 의미를 되찾거나 시도통합 특별법 내 균형 발전 기금 교부 관련 규정의 미흡함을 짚고 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자치의 현주소 등을 점검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빌려 행정통합 의제 속에서 ‘광주’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최 교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주전남특별시’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통합 후 광주의 행정단위와 역사성 등 위상을 우려했다. 정치권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광주’ 지역명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버락치기이자 비민주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광주시민단체, 행정통합 핵심쟁점 긴급 토론회
 “광주 명칭 유지에 행정비용 큰 지 묻고 싶다”
 “발전 과정 무시한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 봐야”
 “광주·전남 재정 구조, 일정 기간 현행 유지해야”

기 사무처장은 “광주 명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드는 행정비용이 그렇게 큰 지 묻고싶다. 통합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대도시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물으며 “시도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만이 라도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을 개정해 광주전남특별법-광주시-5개 구의 3단계 지방자치 체계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통합의 본질이 광주의 해체인지, 자치분권의 재설계인지 돌아봐야 한다. 시의 발전 과정을 무시한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며 “대도시는 행정 단위를 줄인다고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광역 전략, 도시 운영, 생활 행정이 각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 명확히 작동할 때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

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균형발전 기금 관련 규정과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자원 배분원칙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도통합 특별법 초안 제48조의 균형발전 기금 관련 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자원 조달 방안 또는 자원 배분 기준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라며 “어떤 지방채의 몇 퍼센트 등 자원 확보 방안과 배분 원칙·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문제삼으면서 “지방의회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외채 발행과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허용하는 조항은, 특정 정당이 장악한 지역 현실과 방만한 재정 운영 우려를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재정 구조를 현행 비율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협의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가 교육자치에 반영되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특례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 발전 선언이 교육 분야에서는 공허하게 들린다”고 평가했다.

전남지역 교사 정원 문제에 대한 심층 검토 부족, 과밀학급 해소 대책 부재, 민주적 학교 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은 반드시 교육 관련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교육 관련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자치를 논의할 광주·전남 차원의 논의 기구가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부

통합 광주·전남, 재정 ‘골든넘버 6대 4’ 현실화 되나
 이 대통령 “광역통합 시 20조 + 국세·지방세 6대 4 배정”
 “법인세·부가세 이양 등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 통합지역에 연간 최대 5조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통합 후 정부 특별지원에 더해 지방세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시와 농어촌을 감안한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면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과 더불어 국세·지방세 배분도 현재 7.2대 2.8 수준을 6대 4 정도로 배정해 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방세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 광주시 세입·세출 예산은 총 7조6809억원, 전남은 11조6942억원으로 통합 후 예산은 19조3751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 지원 5조원이 더해지면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예산은 25조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4년 한시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 대통령의 20조원 지원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방세로 지원할지, 한시적 교부금 형태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이후에도 25조원 이상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세는 취득세·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등 모두 9가지 세목이며, 이 중 가

장 많은 비중은 취득세와 자동차세이다.

하지만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당 세입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큰 걱정거리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37.15%, 2022년 37.64%, 2023년 38.69%로 서서히 오르다 2024년 36.31%, 2025년 35.52%로 2년 연속 역주행했다.

전남 역시 23.7% 수준으로 서울 73.6%, 부산 42.7%, 인천 49.2% 대전·대구 41%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재원에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높을수록 재정 상태가 건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광주는 지방세 산정기준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며 통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27.3%로 낮아질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 5개 구정장은 최근 “자치권 강화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확보”라며 “통합으로 인한 세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비율을 법정화하고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세 규정을 토대로, 본사가 서울에 있고 광주에서 지부를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세금은 서울로 납부한다”며 “영업지역의 자치구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아파트 구입 등으로 인한 취득세인데 지방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감소 중”이라며 “지방세 비중을 늘리면 통합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고 권한도 생겨 자치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① - 5.5.④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